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26호 | 2022년 10월 6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idp.theminjoo.kr

## ‘23년 청년일자리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 필요성보다 정책 차별성 우선시, 결국 정책실패로 -

고 승 연 연구위원(사회복지학 박사)

### 《 요 약 》

#### ■ ‘23년 청년일자리 예산안의 우려되는 문제점

- 예산의 증감 여부보다 예산이 증감된 이유와 타당성이 문제, ‘기존(前 정부) 사업은 축소, 새 정부의 차별성 부각’을 지향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접근방식에서 큰 하자를 야기, 결국 예산낭비와 정책실패로 귀결
  - 사업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과 대상자의 대폭 확대는 무모한 도전
  - 청년 지원은 줄이고 기업 지원만 늘려서 중소기업 구인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축소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내년 균특회계로 이전하여 일자리 예산과 평가에서도 제외 예정
  - 애로점 많은 구직단념청년 사업, 기존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확대는 무리수
  - 신규 사업들이 내용도 명칭도 대동소이, 부처 내 소통 부족의 결과

#### ■ 청년일자리 예산안(사업)의 조정 방향에 대한 제안

- (일경험 지원) 대상만 다르고 내용이 유사한 신규 사업들, 차별화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전문성이나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바람직
-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도약계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과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청년 입장에서 각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검토 후 추진
- (지역청년 고용지원) 예산 규모의 유지 또는 확대 필요, 일자리 비중이 큰 만큼 균특회계로 이전 시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성과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 필요
- (구직단념 청년지원) 사업 확대 이전에 정상화부터, 민·관이 밀착하여 수행하는 사회성과보 상사업(Social Impact Bond)을 활용한 성과기반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 제안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23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의 특징<sup>1)</sup>

### ○ '23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의 주된 방향은 '감축'

- 표면적으로 '23년 일자리 예산 편성 방향은 “미래 대비 집중 투자”로 일자리 예산을 감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 내용적으로 (공익형)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재직자 훈련 및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 분야 중심의 교육훈련 예산 확대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17~'23)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안)
일자리 예산(억 원)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1,436	315,809	300,340
전년대비 증가율(%)	(8.0)	(13.0)	(17.9)	(20.1)	(18.2)	(3.9)	(△4.9)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2.3조]	5.4 [558.0조]	5.2 [607.7조]	4.6 [639.0조]

## 2. 청년일자리 예산의 특이점

### (1) 일경험 지원

#### ○ 일경험은 직무체험('22년)에서 직무탐색·기초 및 실전역량 강화, 실무경험 등으로 확대, 사업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11배)과 대상자(2배) 대폭 확대

- (예산 증액) '22년 1만 명 50억 원 → '23년 2만 명 553.3억 원
- 직무체험('22년)뿐만 아니라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와 실무 경험을 포함하여 사업 확대
- '25년까지 4단계의 로드맵 마련,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를 토대로 확산하는 등 단계별 주요 과제 추진
  - 준비단계('22년, 로드맵 마련), 도입단계('23년, 우수 프로그램 가이드 마련), 확산단계('24년), 정착단계('25년)

### (2)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과가 저조해서 폐지, 감액한다는 발표와 달리 '22년 변경된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확대 추진 계획, 내년도 예산은 2배로 확대

- (예산 증액) '22년 14만 명, 5,428억 원 → '23년 11,163억 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존 청년 채용장려금('21년 21만 명)을 일괄 종료하고, '22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하여 추진 중

1)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8. 30.)'와 부처별 '2023년도 성과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최대 월 80만 원, 1년 960만 원)이 내용으로 올해와 동일
-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폭 축소, 사업을 '청년 도약계좌'로 대체한다는 전제로 예산은 절반으로, 대상자는 1/4 이하로 축소
- (예산 감액) '22년 신규 7만 명(+지속) 1조 3099억 원 → '23년 신규 1.5만 명(+지속) 6375억 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정부지원금 중단(현재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 정부가 전부 지원, 30~49인 80% 50~199인 50% 지원)

### (3) 지역청년 고용지원

-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16.8% 예산 축소, '23년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일자리 예산 및 평가에서 제외 예상
- (예산 감액) '21년 결산 2,450억 원 → '22년 예산 2,400억 원 → '23년 1,994억 원 (16.8%↓)
- '23년부터 사업 예산 전체가 균특회계로 이전함에 따라 장부상 정부의 청년대상 직접일자리 비중 감소 예상

### (4) 구직단념 청년지원

- 구직단념 청년지원 사업의 장기프로그램(5개월) 신설, 4배 이상 예산 확대
- (예산 증액) '22년 76억 원(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원(청년도전지원사업 36억 원 + 도약지원프로그램 365억 원 + 운영비)
- '21년부터 시작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을 8,000명으로 증원하고 이중 5,000명을 선발하여 5개월 과정의 '청년도약지원프로그램'(신설) 과정 진행, 이수 시 300만 원 '청년도약준비금' 지급

## 3. 청년일자리 예산안(사업)의 조정 방향에 대한 제안

- 예산의 증감 여부보다 예산이 증감된 이유와 타당성이 문제, '기존(前 정부) 사업은 축소, 새 정부의 차별성 부각'이 우선시 될 경우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귀결
- 예산 편성에 있어 정책 목표와 지향성이 중요, 하지만 정책 성과가 없다면 결국 정책 실패
-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최종 정책 결정은 정책 대상자(청년)의 몫이라는 인식 필요

## (1) 신규 사업들 대부분이 일경험 사업, 사업 인프라도 없이 예산 확대가 적절한가?

- 대상만 다르고 내용이 유사한 신규 사업들, 차별화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전문성이나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바람직
  - 내년도 대표적인 신규 청년일자리 사업인 ▶일경험 유형 확대 ▶도약지원프로그램 ▶청년도약보장패키지는 대상만 일부 다를 뿐, 역량강화를 통한 ‘일경험’이 주된 내용으로 정부의 대표 사업인 ‘국취(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유사
  - 일경험 사업에서 청년들의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민간기업의 협조가 관건인데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기업과의 매칭에 애로, 신규 사업들은 서비스 전달체계 등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과 대상자 확대, 예산 낭비와 성과 부진 예상
  - 사업 운영은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용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각 사업별로 차별화된 성과(outcome)를 명확히 하여 소통 필요
    -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이 청년(90.8%, '21년<sup>2)</sup>)이며 진로탐색, 역량강화(교육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실무체험으로 구성(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노동시장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 감액: ('22년) 60만 명, 1.5조 원 → ('23년) 46만 명, 1.2조 원 (20%↓))

## (2) 청년 지원은 줄이고 기업 지원만 늘려도, 중소기업 구인난 개선이 가능한가?

-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확대된 청년고용장려금을 성과에 대한 논란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한 청년고용지원책으로 인식, 미스매칭 해소와 장기근속 등의 성과향상 방안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의 명칭으로 시행된 청년고용장려금이 '22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시행 중
  - 최근 2~3년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을 확대하였으나, 한시사업으로 종료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근거 모호
  -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 근로 시 지급 조건, 중소기업 지원확대로 대기업 선호도가 강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에 부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또한 사업명이나 내용·기간 등이 대동소이하게 변경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의 변경 필요, 법제화를 통해 통일화시켜 일관성있게 추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sup>3)</sup>에 청년고용장려금의 명칭 및 주요 내용(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명시

2) 2021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도약계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 청년 입장에서 각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추진 필요
  - 청년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광의의 목적은 유사하나, 청년도약계좌는 취업과 무관하게 저소득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상과 목적 상이
    - 청년도약계좌는 '22년 2월부터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윤석열 후보가 10년 1억 만들기를 공약화하였으나 최근에 5년 5,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축소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대체할 경우, 2년 장기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이 1년 단기지원(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변경되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가능
    - 2년 고용유지율('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6%, 청년내일채움공제 67.4%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높은 성과의 우수 사업으로, 퇴사 시 일정 조건으로 지속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계속 추진 필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sup>4)</sup>: (일자리) 2016년 7월 이래 누적 507,370명의 청년근로자가 116,213개소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16년 7월~'21년 12월) (장기근속) '21년 12월 기준, 총 133,065명이 만기금을 수령하였고,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비율이 비가입 청년 대비 약 30%p 높은 것으로 추정 (경력형성)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이직한 청년의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수령

### (3) 자원의존도가 높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축소할 이유는 무엇인가?

-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액은 부적절, 일자리 비중이 큰 만큼 균특회계로 이전 시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성과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 필요
  - 해당 사업은 '20년 한 해 동안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성과 달성, 청년 참여자 만족도(97.1%, '21년)가 높은 우수 사업<sup>5)</sup>
  - '21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증가된 일자리를 줄이면서 예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 예산안에는 16.8% 예산 감액하고 목표인원은 5% 증원, 일자리 질 우려
  -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의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23년 균특회계로 이관되면 공식적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관리 부실 우려, 별도로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필요
    - '22년 예산: 국취 일경험프로그램 1,162억 원(2.5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96억 원(2.59만 명)<sup>6)</sup>

4) 2021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보고서

5) 행정안전부. (2022. 2. 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 개 창출.

6) 행정안전부. (202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21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4) 애로점 많은 구직단념청년 사업, 사업 확대 전에 기존 사업의 정상화가 먼저 아닌가?**

- 구직단념청년 발굴시의 애로점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심화 프로그램 마련에 예산 확대 부적절,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정상화가 우선
  - 구직단념청년의 특수성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운영상 애로점(대상 발굴)이 발생
    - 사업대상 중 30%는 구직단념청년이 아닌 자도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시작했음에도 '21년 목표 인원의 64% 달성,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벤트까지 실시하여 수행<sup>7)</sup>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대상인원 60% 증원 및 4배 이상 예산확대를 계획하고 전달체계는 현재와 유사하게 20개 내외의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운영, 필연적으로 파행적 운영 가능
  - 구직단념청년 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민·관이 밀착하고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으로, 영국·독일 등에서 성공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up>8)</sup>을 활용하여 성과기반의 프로젝트로 추진을 제안

**(5) 부처 내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일자리 사업명들 다수가 유사('도약'의 중복 사용)하여 차별성 부족, 사업명 조정 필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도약지원프로그램(이하 '23년~),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청친강소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은 내년에 계획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사업들로, 사업명의 차별성이나 유의미성 부족
  - 사업명은 대상자들과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에도 영향, 직관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고 타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7) 주애진. (2022. 9. 20). '구직 단념 청년' 지원한다더니... 신청자 없어 주부-대학생까지 모집, 동아일보.

8)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만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영역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부록]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사업내용) ❶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❷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❸ (이수 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 청년센터(예산범위 내 공모, 지방비 20% 매칭), 구직단념청년
-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에게 프로그램 이수 시 실비 지원, (자치단체 청년센터 프로그램(2~3개월) 이수 시 20만 원)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 (사업개요) 청년실업 위기극복과 청년의 지역 정착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유형)

지역혁신형 일자리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 ·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2년), 인건비 지원 종료 후 3년차에 정규직 유지 시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
상생기반 대응형 일자리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 지원 · 소멸위기지역 내 청년의 신규 창업 지원(1~2년, 연 1,500만 원) +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1년간 2,400만 원 지원 ·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간 1,500만 원 지원, 2년차 청년 추가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간 2,400만 원 지원
지역포용형 일자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1인당 연 2,250만 원의 인건비 1년간 지원

### ※ 청년고용장려금 종류별 특징(고용노동부)

장려금 종류	장려금별 채용시점	대상청년	대상기업	조건	지원수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 1. 1. ~ 12. 31.	취업애로청년 <sup>9)</sup>	5인 이상 중소기업 <sup>10)</sup>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장) 월80만 원 × 12개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종료)	'20. 12. 1. ~ '21. 12. 31.	청년 (만15~34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최장) 월75만 원 × 12개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종료)	~ '20. 11. 30.	청년 (만15~34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월75만 원 × 3년

주: 채용시점에 맞게 3개 장려금 모두 (소급) 신청 가능

- 9) 취업애로청년: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대학교 졸업 후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한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시 2년 이상 근속 시 청년 납입금에 정부와 기업이 매칭하여 자산 형성 지원
- (임금 상한) 300만 원
- (기업자부담비율(2년간))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60만 원), 50~199인 50%(150만 원), 20인 이상 100%(30만 원)
-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 1. 1.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II 유형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층: 중위소득 120%이하, 5억 원)	■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층: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②-1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③ 구직활동 지원	④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능력 관련 심층 분석</li> <li>②희망직종 및 선호직종 상담</li> <li>③진로탐색 관련 개인별 과제 부여 및 점검</li> <li>④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li> <li>⑤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직업훈련 초기상담을 통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기관 연계</li> <li>②일경험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일학습병행 등</li> <li>③창업지원* 안내 및 연계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이력서 클리닉, 면접특강 등</li> <li>②동행면접</li> <li>③취업처 정보제공 및 알선 서비스 제공</li> <li>④구직활동의무 이행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또는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취업사실 확인, 취업성공수당 지원</li> <li>②취업자 → 근속유지를 위한 유선상담</li> <li>③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li> <li>④부정수급자 모니터링·조사</li> </ul>

-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소득 및 자산 제한)들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1) 체험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역량 및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30일)

.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실비수당(1일 2.2만 원) 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10만 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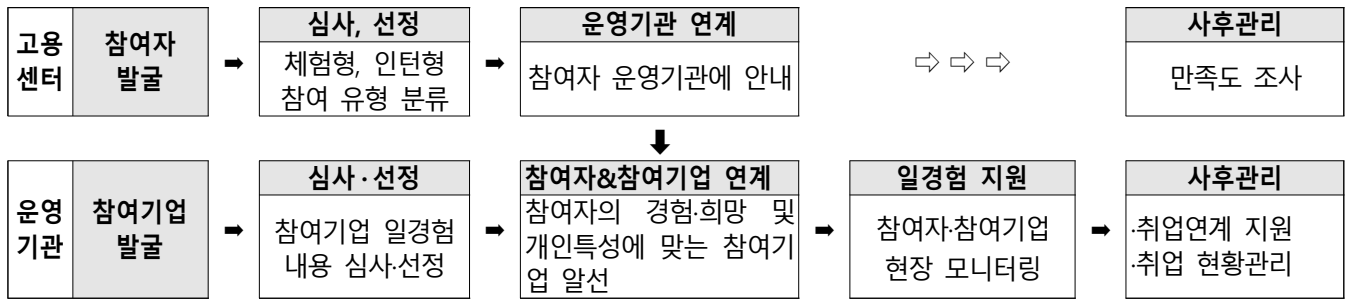
2) 인턴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고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3개월)

. 참여자에게 참여자수당(월 191만원×3개월,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 멘토링비(월 10만 원) 지급

10)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식서비스 산업·지역주력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하는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지원 가능



< 일경험 사업 지원 프로세스 >



※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미포함)	
소득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혜택	은행이자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연 2~4% (최대 36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가입 방법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미정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7. 10.). 구직단념 청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5. 1.).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2. 6. 2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6. 30.).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8. 30.). '23년 일자리예산안 30.0조원,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2. 8.).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2. 8.).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II.
- 김하영. (2022. 9. 1.). 청년도약계좌 축소 "공약 파기 배신감""재정 고려한 정책", 중앙일보.
- 대한민국정부. (2022. 9. 2.). 2023년도 성과계획서
- 행정안전부. (2022.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2. 9.).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 유진아. (2022. 9. 12.).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뭐가 다를까?, BUSINESS WATCH.
- 주애진. (2022. 9. 20.). '구직 단념 청년' 지원한다더니... 신청자 없어 주부-대학생까지 모집, 동아일보.